

'정부-은행 지급보증 MOU' 어떤 내용 담나

실적따라 유동성 지원·외화 차입 제한

중소 지원 구체화…가계 채무부담 완화방안도 포함

정부는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 도덕적 해이 방지,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등 은행의 자구노력을 담은 MOU(양해각서)를 다음달 7일까지 18개 은행과 체결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은행별 MOU 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에서 은행이 금감원에 제출할 MOU의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행계획이 마련되면 일별, 월별 점검과 분기별 평가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동성 지원규모 및 대외채무 지급보증 한도 축소, 금리 및 보증료 차등적용, 경영진 등에 대한 재해조치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7일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 포기 각서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자체적인 유동성 지원계획을 마련해 제시하는 대로 경영진과 협력해

용하되,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한해 신규 차입을 인정키로 했다.

또 외화예금 유지계획, 외화차입구조 개선계획, 차입 만기연장 및 차입선 확대, 외화자금 조달수단 및 지역의 다변화 계획과 함께 정부의 지급보증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MOU에 담도록 했다.

정부는 각 은행이 우량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의 자금수요에 대한 유동성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체가 없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키로 피해 중소기업을 포함해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저소득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유예, 연체 없는 가계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등 가계의 채무부담 완화방안도 MOU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대외경쟁력 강화와 경영건전성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정부 지급보증안 처리 6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고를 위해 유동성,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개선할 방안을 MOU에 담아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자금 조달 운용과 관련, 은행채,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시장상 수신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예수금 비중을 확대해

산 확대경쟁 자제, 자산의 유동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수익성 제고를 위해 특관예금 등 고원가성 자금조달과 지나친 금리할인 등 출혈경쟁을 자제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지출 억제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토록 했다. /연합뉴스

제작: 김민정

기자: 김민정

편집: 김민정

제작: 김민정